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7호 2015년 6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37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발간물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이 광 한 입니다.

어느덧 2015년의 절반이 지나고 결실을 위한 노력을 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절반도 그러하였듯이 남은 절반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복지예산 편중으로 인한 SOC사업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로 건설수요가 급감하며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헤쳐 나갈 자구책을 우리 스스로가 강구해 나가야 하며, 그 중심에 우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의 공사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활성화와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다르게 업역다툼으로 호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전문성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발주확대 등 우리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4만여 전문건설사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자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수시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해내는 강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끝으로 금번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기여하신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인 가족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노재화 원장과 홍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6월 5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의 주재로 열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에 참석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피력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을 펼쳤다. 우리 연구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는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 확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예산 절약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민·관 합동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지난 6월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간담회 진행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정부관계자 및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간담회는 범정부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현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법집행에 반영할 목적으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조·건설·유통·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주한 신규 연구용역(2건)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수행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 두 건의 과제는 「조합의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연구책임자: 김태준 선임연구원)과 「준조합원제도 도입에 따른 보증·용자 상품개발」(연구책임자: 박선구 책임연구원) 연구용역으로 각 과제수행을 통해 조합의 자산운용 현황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위원 위촉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이 지난 6월 9일, 동반성장위원회 지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지수위원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용역과제 종료 및 연구성과물 제출

- 우리 연구원은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용역과제의 수행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 동 연구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수급전망, 유헴 건설기계 수출방안, 건설기계 총량제 및 차령제 도입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계시장 수급안정과 임대시장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 홍성진 선임연구원, 조명수 연구원이 수행해왔다.

201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심사위원회' 참석

- 우리 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포상 심사(안)의 심의 및 의결, 추천대상자 심사와 확정 등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 참석

-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청 감사관실 주최로 열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감사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시행방안'을 평가하고 토론하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건설기업인 BI그룹과 우리 전문건설사의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BI는 글로벌 건설 250개중 189위이며, 카자흐스탄 1위 건설사로 카자흐스탄의 SOC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 이번 MOU에 따라 BI그룹은 앞으로 우리 전문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지법인 설립, 건설면허 취득 등을 지원하며, 카자흐스탄 건설제도, 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게 된다.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 국토부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 따라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지게 된다.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마련

-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현재 34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항목은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였다.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소액채당금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발간

- 본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종합·전문건설업간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우리의 건설산업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됨.
-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많은 쟁점이 있으나,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에 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 불과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소규모 복합공사는 복합공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가 결정되는 비정상상을 정상화하는 제도임. 따라서 건설업 등록체계를 위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범위 상의 예외사항도 아님.
 - 3~10억 원 공사의 공정·품질·안전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기피하는 발주자의 인식과 경향으로 인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소지가 적음. 따라서 종합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임.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지 않음.
 - 오랜 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여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전문분야 시공능력과 계획·관리 및 조정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으며,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도 양호함.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능력에 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 발주자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는 제외될 것이므로, 안전 위험성 및 부실시공이 증가하지 않음.
 - 도급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최대 448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최대 1조2,419억의 거래비용이 공사비에 추가 투입되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이 기대됨.
 -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보다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의무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임.
-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규제 기요틴)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